

물가문제: 진단과 처방

(2011. 4. 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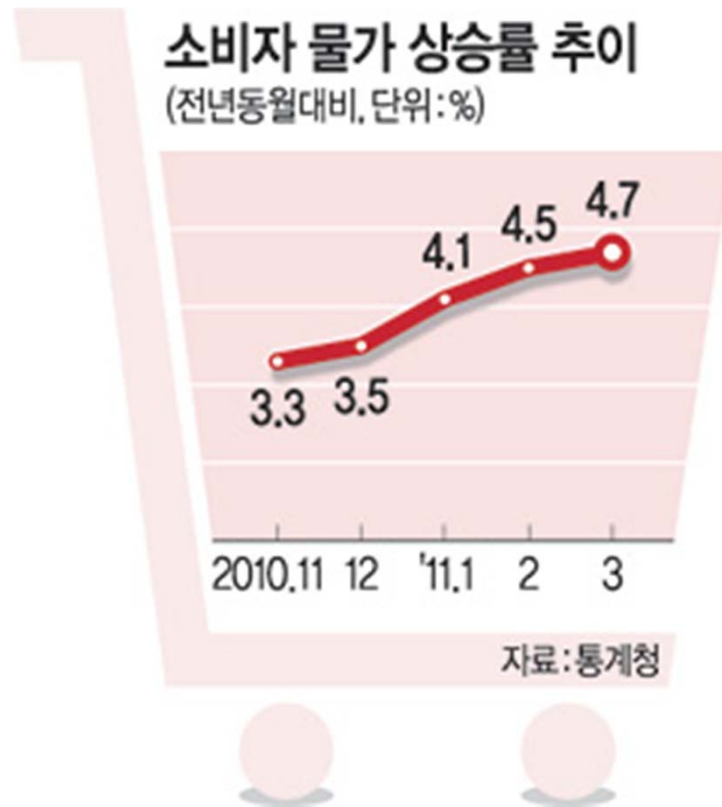
유종일
KDI국제정책대학원

목차

1. 물가문제의 실상
2. 물가상승의 근인
 - 비용상승
 - 수요견인
3. 물가상승의 원인
 - 정책요인
 - 구조적 요인
4. 물가안정 정책
 - 정부정책
 - 대안정책

1. 물가문제의 실상

가파른 물가상승



무상교육 · 급식 효과

-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를 제외하면 3월에 5.1% 상승

각종 물가지수 상승률

구 분	'08	'09	'10. 1	2	3	4	5	6	7	8	9	10	11	12	'11. 1	2
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%)	4.7	2.8	3.1	2.7	2.3	2.6	2.7	2.6	2.6	2.6	3.6	4.1	3.3	3.5	4.1	4.5
근원물가지수 상승률(%)	4.2	3.6	2.1	1.9	1.5	1.5	1.6	1.7	1.7	1.8	1.9	1.9	1.8	2.0	2.6	3.1
신선식품가격지수 상승률(%)	-5.8	7.5	2.5	8.4	8.7	12.1	9.9	13.5	16.1	20.0	45.5	49.4	37.4	33.8	30.2	25.2
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(%)	8.6	-0.2	10.3	2.4	2.6	3.2	4.6	4.6	3.4	3.1	4.0	5.0	4.9	5.3	6.2	6.6
수입물가지수 상승률(%)	36.2	-4.1	-0.9	-4.1	-4.3	5.1	11.3	8.0	7.5	5.7	7.8	8.1	8.2	12.7	14.1	16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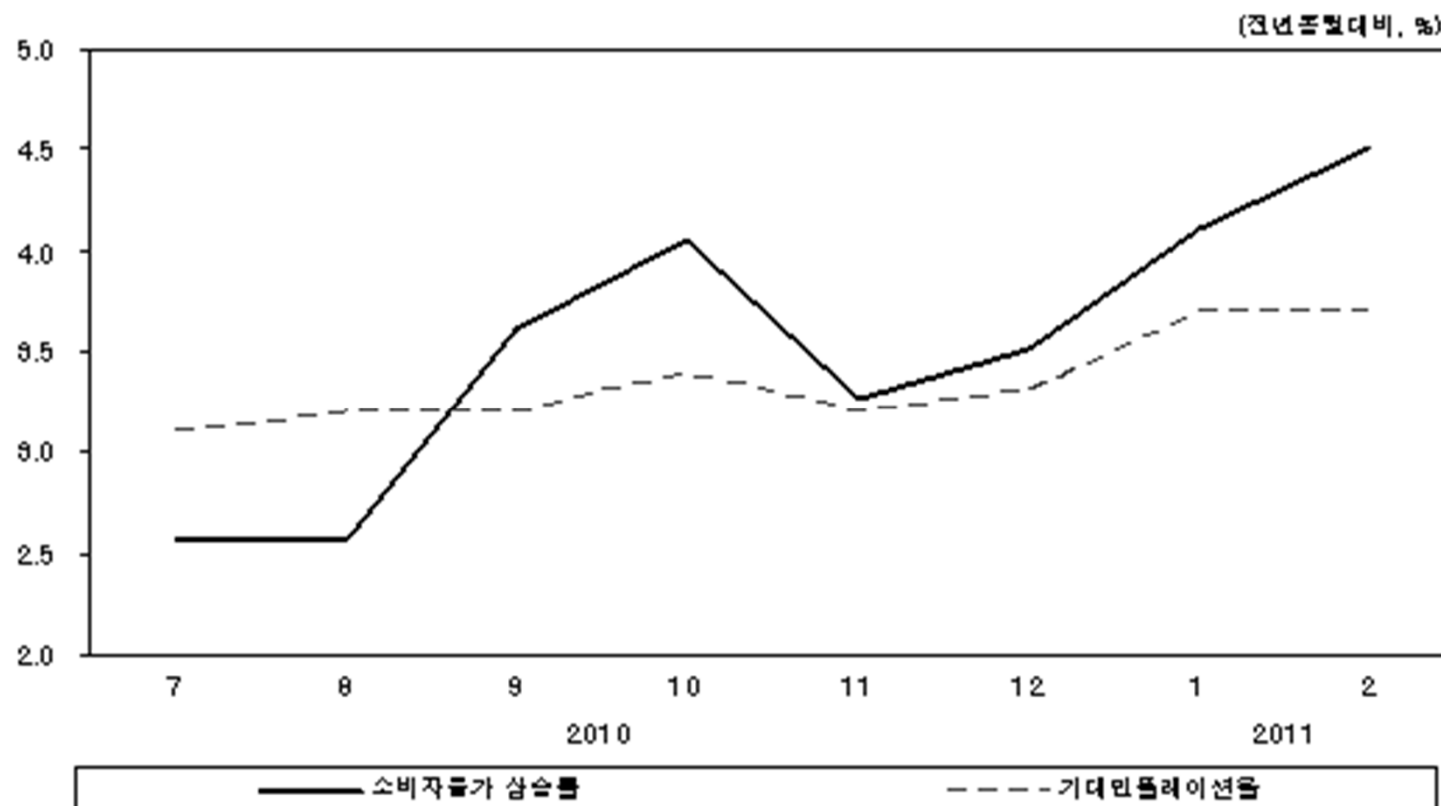
물가상승 전망

- 근원물가, 서비스물가 등의 상승은 향후 물가상승세가 상당히 지속될 것임을 시사
 - 한국은행: "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치인 3%를 '상당 폭' 상회할 것" <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>
 - ADB: "4.6% 성장, 물가는 3.5%" <아시아 경제 전망>
 - 일부 민간연구소: "물가상승률 전망 4%로 상향 조정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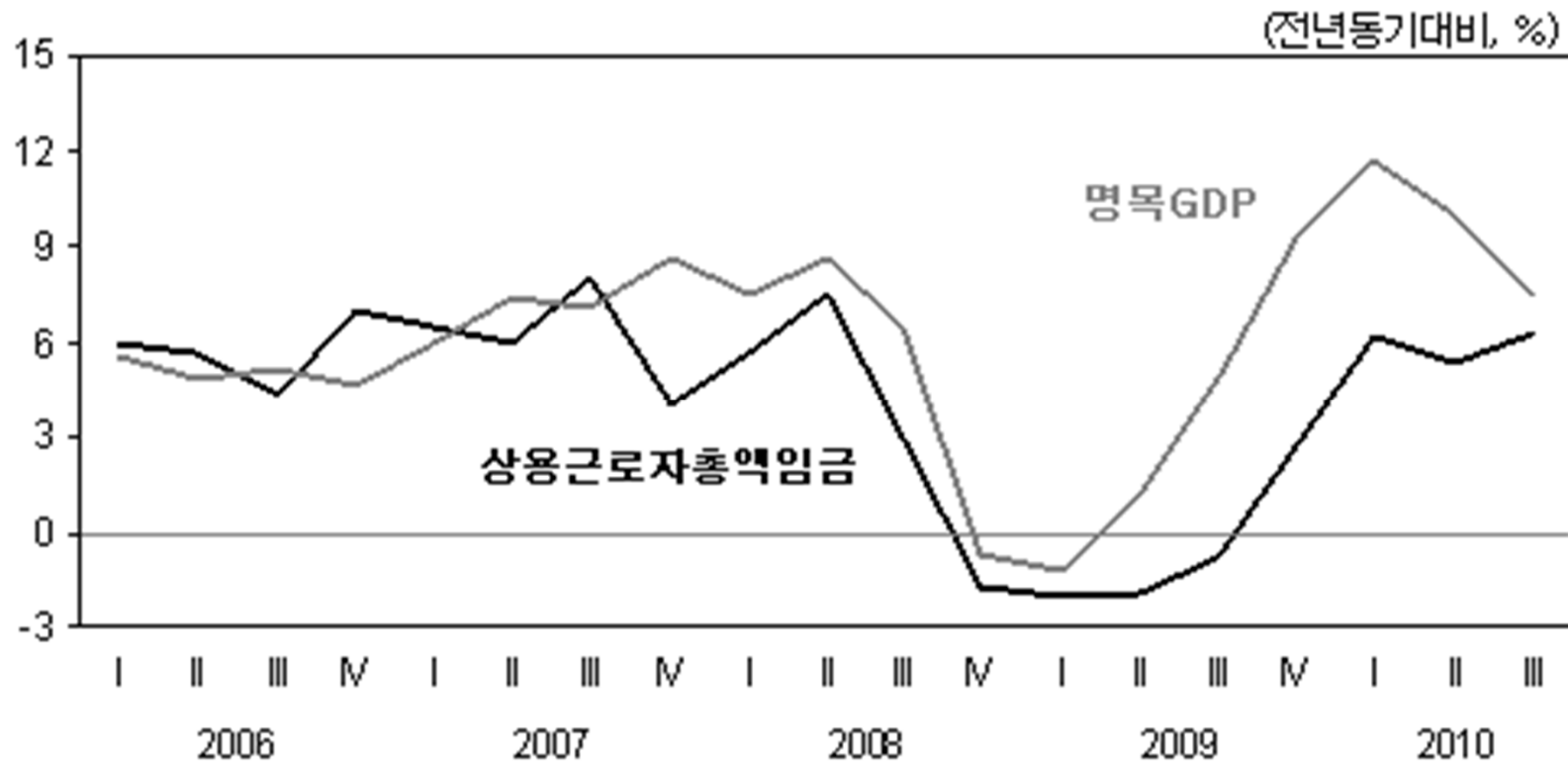
물가상승, 왜 문제인가?

- 일반적으로 화폐중립성 성립, 그러나
- 물가상승률이 높으면, 자원분배 왜곡
- 물가상승 가속화되면,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안정화 비용 (긴축정책에 의한 경기위축과 실업) 초래
-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
 - 채무자 유리, 채권자(금리생활자 포함) 불리
 - 임금노동자는? 인플레이션 종류에 따라 다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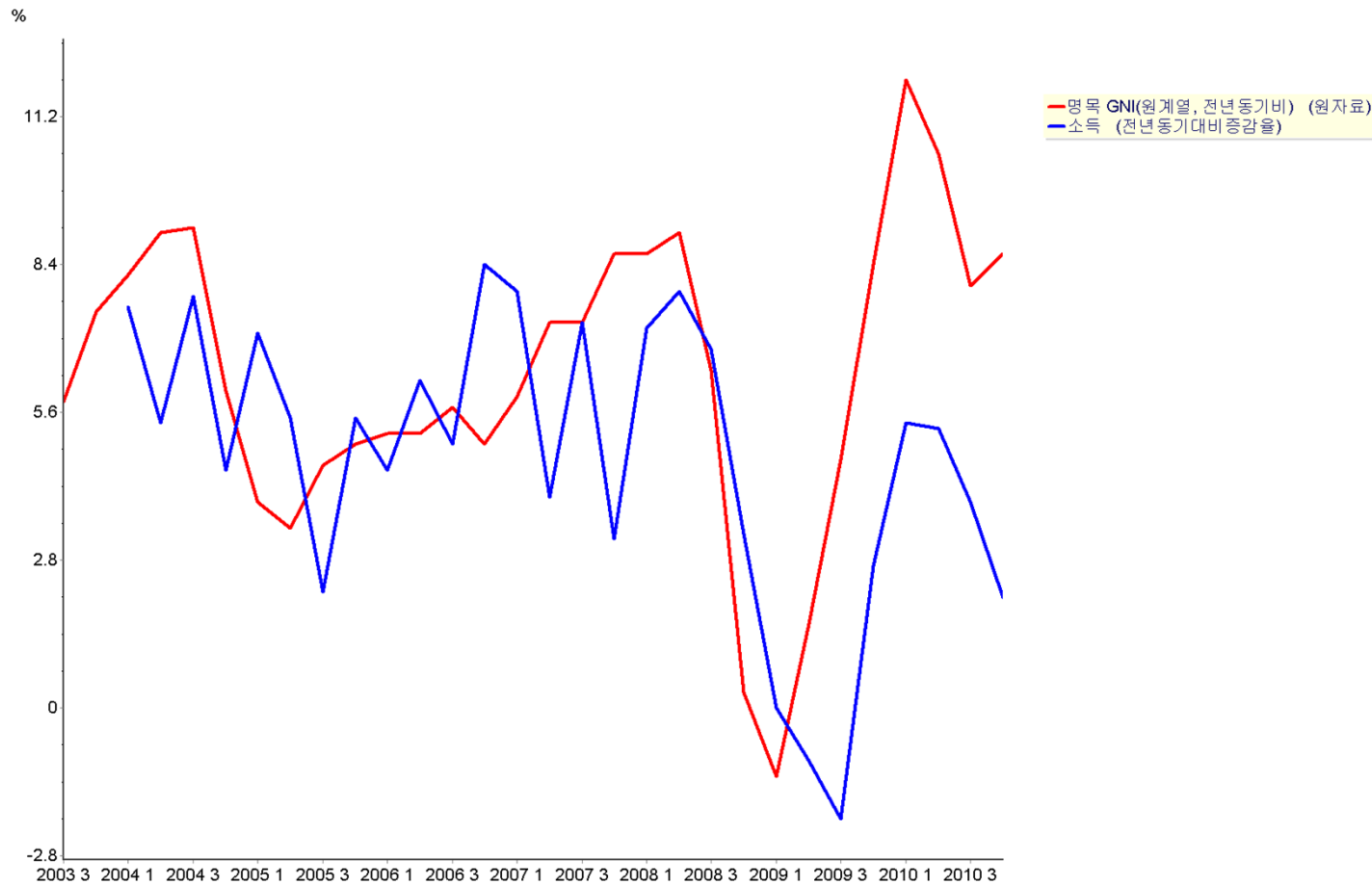
기대인플레이션율: 인플레 가속화의 핵심적 매개
고리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



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상태가 2007년 4/4분기 이후 지속



국민총소득과 가구소득 사이에도 2009년부터 큰 차이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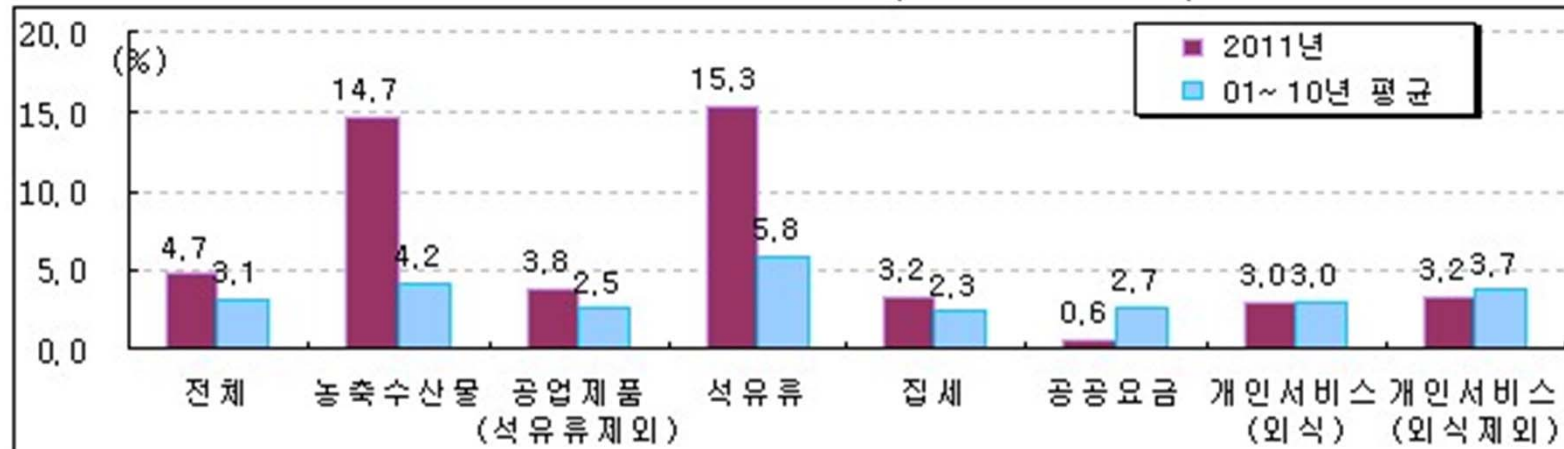


2. 물가상승의 근인: 비용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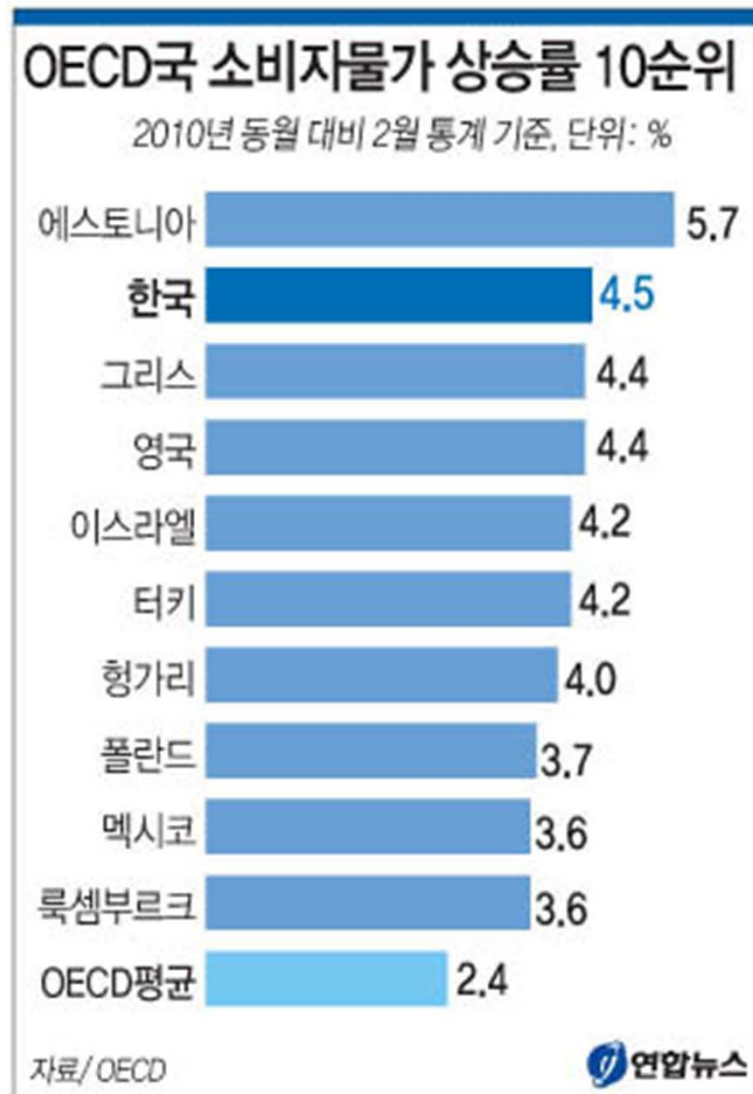
- 해외요인 (수입물가상승에 반영)
 - 원유,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
 -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아랍정정불안, 작황부진 등 공급측 애로가 겹침
 -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가치 하락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, 중국발 인플레이션
- 국내요인
 - 구제역 파동,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공급차질
 -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세상승

* 금년의 물가상승은 농수축산물과 석유류, 집세 등이 주도

* 공공요금 인상요인 잠재, 서비스요금 상승세 확대



- 물가급등은 beyond control? (이명박 대통령)
 - 해외요인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다가 아님 (국제비교)
 - 비용상승 중에서도 전세난은 정책실패의 문제
 - 수요, 정책, 구조 문제도 존재함



반종빈 기자 201103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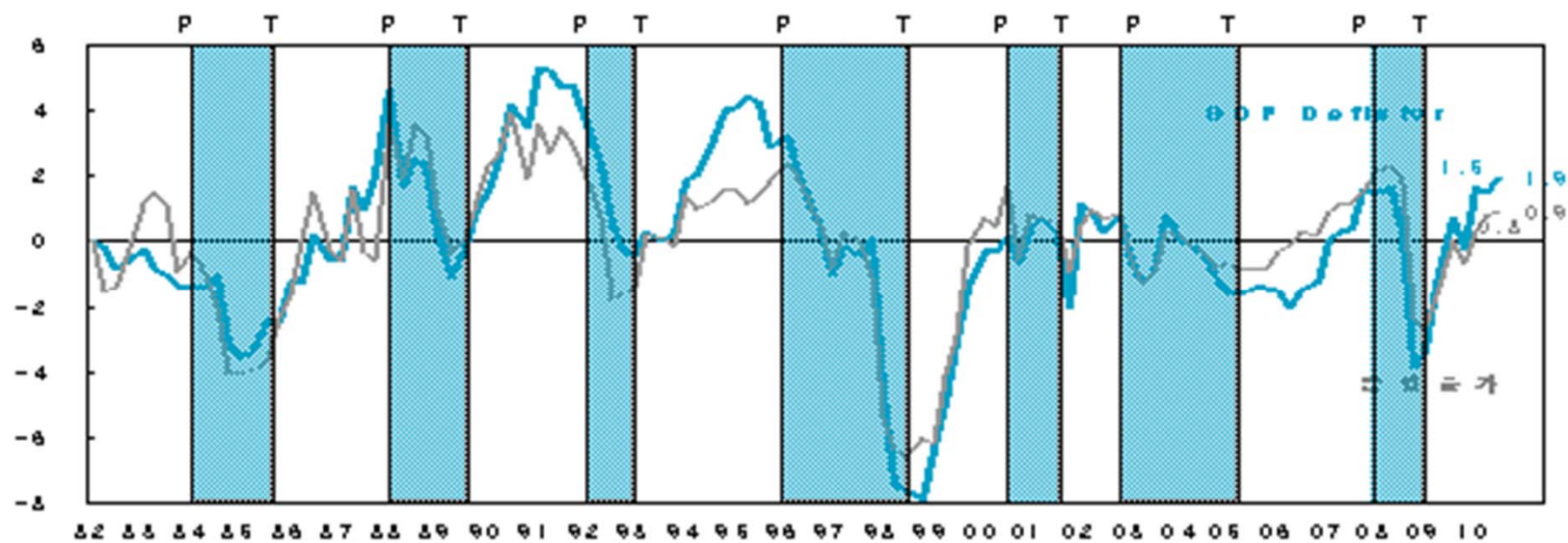
yonhap_graphics@트위터

YONHAP NEWS

2. 물가상승의 근인: 수요견인

-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진행 추정
 - 2010년 성장률 6.1%
 - 최근 근원물가, 서비스물가의 가파른 상승세
 - 총수요 압력 (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) 2010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을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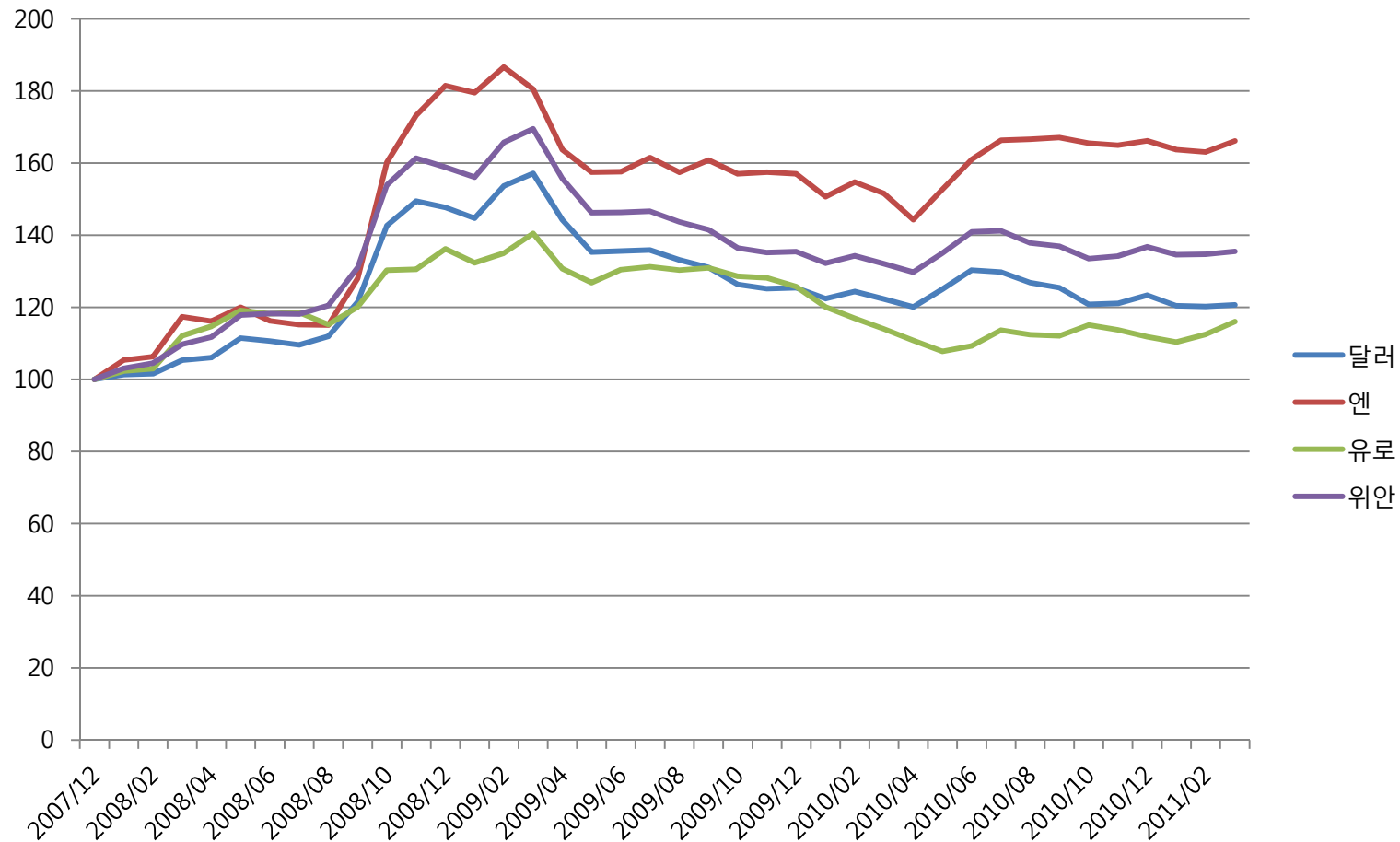
총수요 압력



3. 물가상승의 원인: 정책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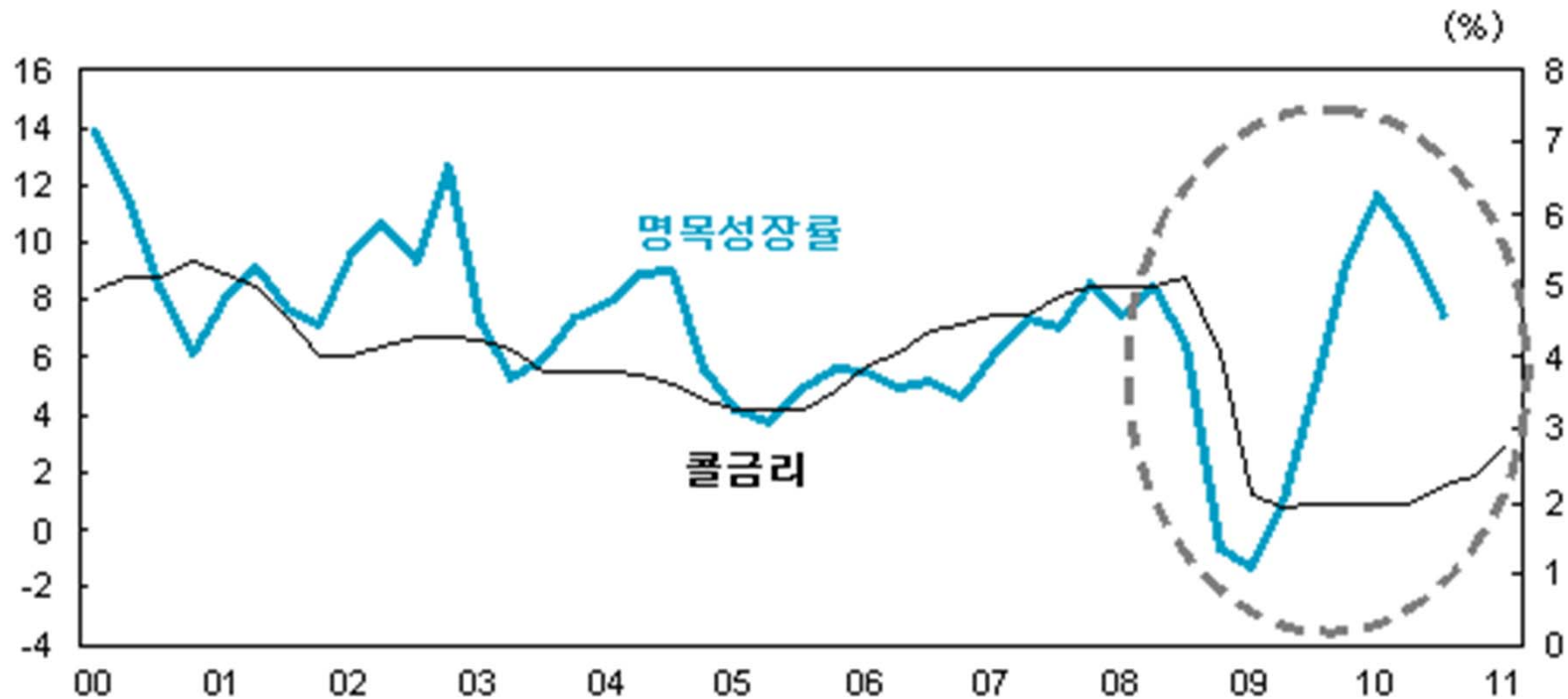
-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만...
- 수요와 공급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요인은?
즉, 물가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?
 - 성장지상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(고환율, 저금리, 적자재정)
 - 수출지향적 독점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

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**고환율 정책** 지속, 모 든 주요 통화에 대해 상당폭의 평가절하



- 달러의 국제적 약세에도 불구하고, 원화는 2007년 말과 2010년 말 사이에 달러 대비 명목환율은 23.4%, 양극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감안한 실질환율은 17.3% 상승
-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전반적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
 - 고환율은 가계에서 수출기업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를 지님
- 최근 정부는 환율하락을 용인하고 있으나, 실기한 후의 뒤늦은 대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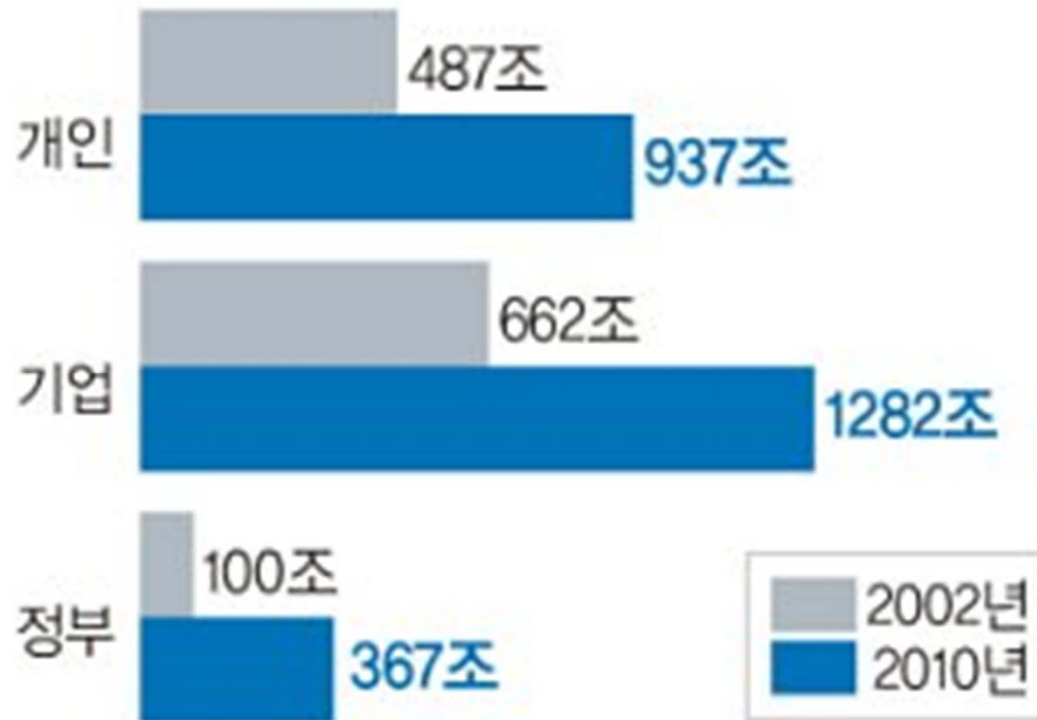
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저금리 정책을 경기회복 이후에도 지속,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었음



-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저금리정책 강요 (열석발언권 논란, 비서관 출신 한은총재 임명, 한국은행의 청와대 직보 등)
- 금리인상 시기 실기로 물가상승세 확산
-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심각

개인, 비금융기업,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 는 작년 말 현재 약 2586조원

이자부 부채 규모 (단위: 원)



자료: 한국은행

- 이자부 금융부채는 2002년 말 명목 GDP의 1.68배에서 작년 말 2.21배로 증가
- 가계부채 문제
 - 2009년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% (미국보다 20% 높고, 지난해 더 상승)
 -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, 만기일 시상환 부채 비율도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
- 공기업 부채 문제
 - 2010년말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 약 255조원
 - 민간기업 부채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증가율

부자감세정책, 4대강사업 등 지출확대정책
으로 정부부채 OECD국가 중 최고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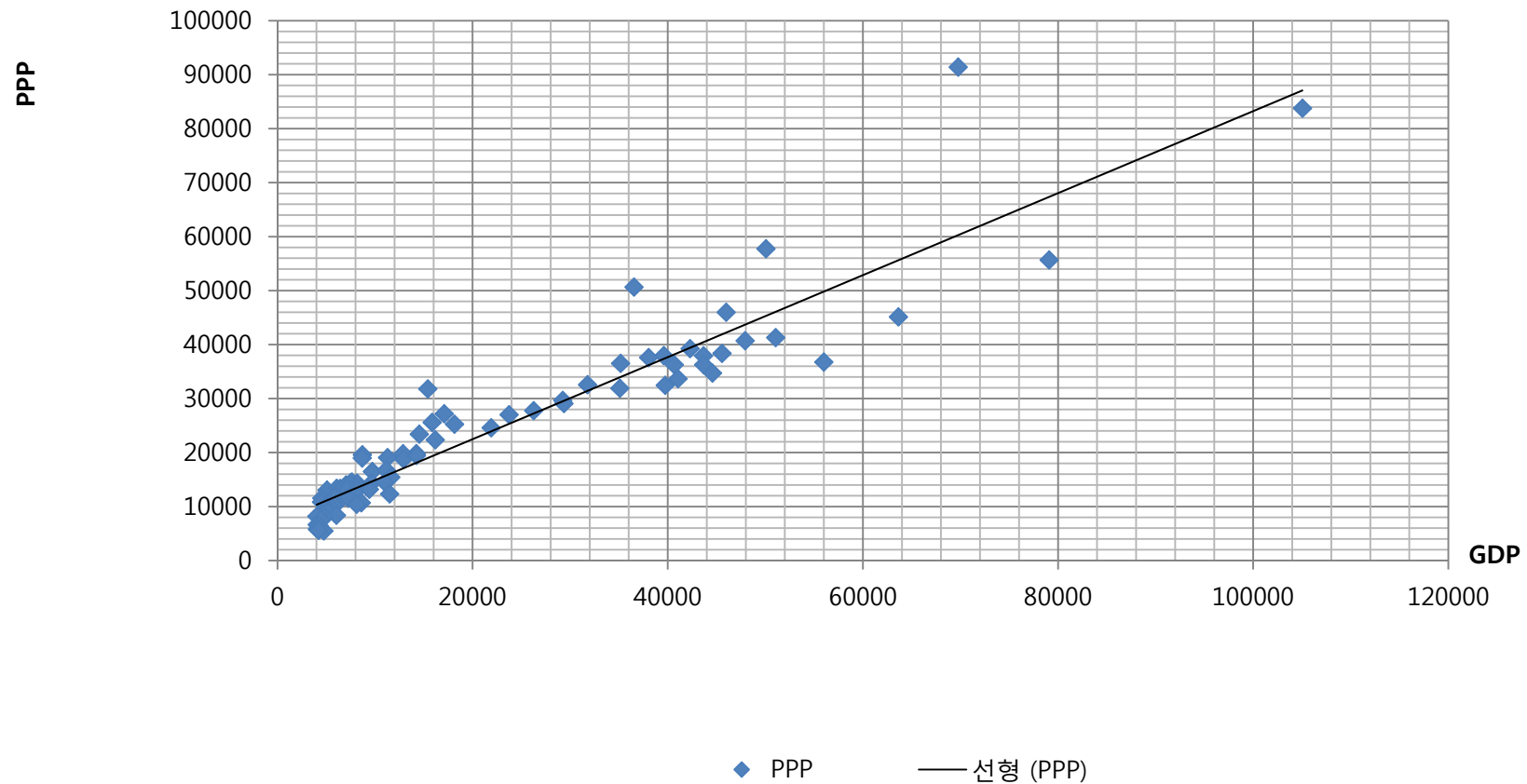


3. 물가상승의 원인: 구조적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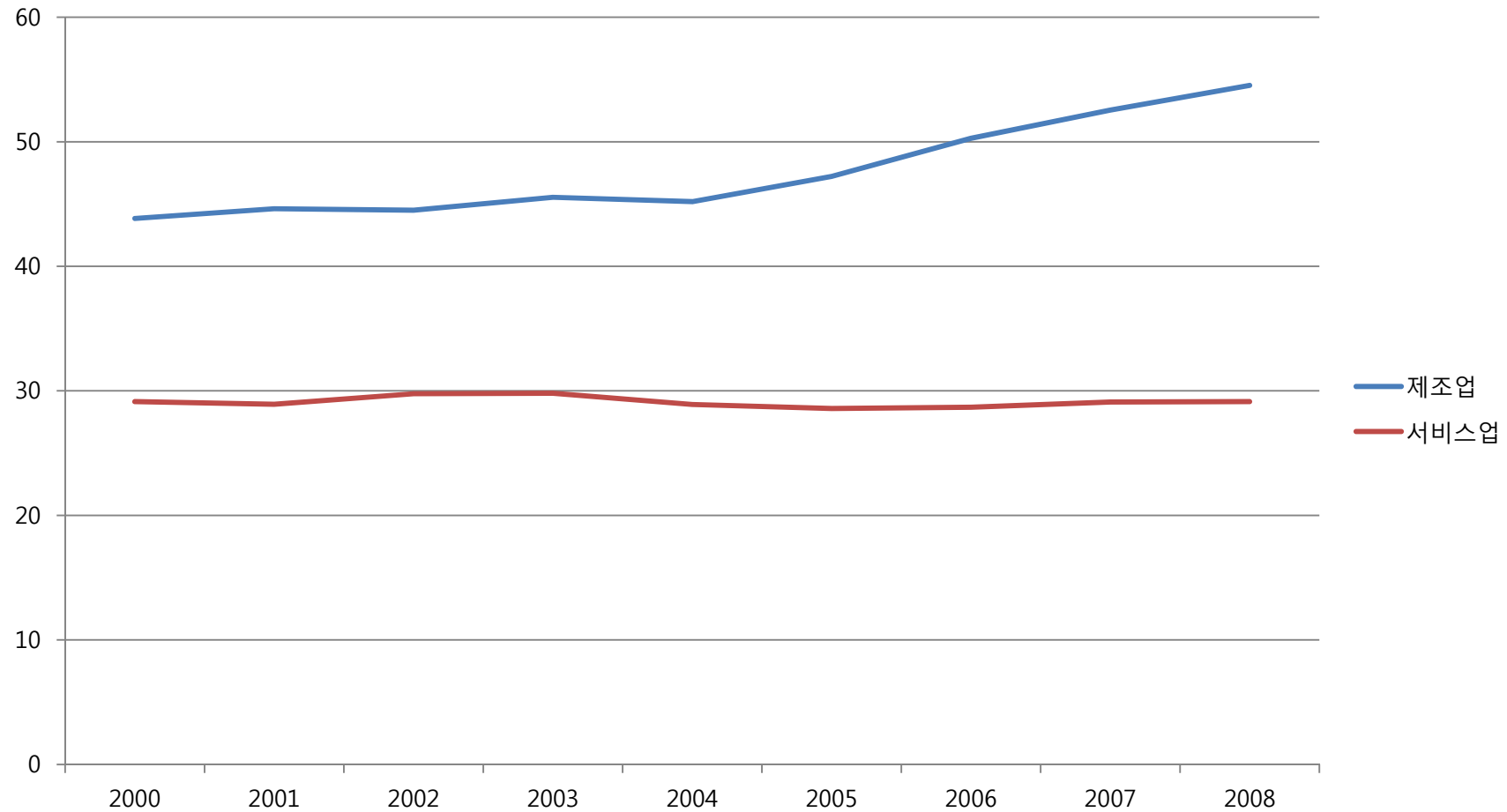
- 고환율과 경제구조

- 고환율은 곧 교역재(공산품, 농산품)의 상대가격이 비교역재(서비스)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
- 임금이 낮은 빈국일수록 서비스가격이 낮고, 임금이 높은 부국일수록 서비스 가격이 높음: 우리나라는 부국이면서 그에 비해 임금이 낮은 현실 (특히 서비스업 임금 더욱 낮음)
-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막대한 생산성 격차는 이러한 부당한 상대가격(고환율)을 반영

구매력평가국민소득(PPP)이 GDP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 (즉, 고환율에 의해 GDP가 낮게 잡히는 나라) 순위에서 한국은 88개국 중 6위 차지



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미국 대비 비율 추이를 보면 격차가 매우 크고 증가 추세



- 독점대기업과 물가

-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주력을 이루는 산업분야에서 비용상승은 곧바로 제품가격으로 이전되지만
-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미미하고 협상력도 약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실
- 노동시장의 분절화 (비정규직,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) 구조와 수출기업중심 산업구조 (고환율의 구조적 배경) 사이에 조응관계 성립

-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과다
 - 정책실패가 누적되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지출구조 형성
 - 최근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사교육비 꾸준히 증가
 - 대학 등록금은 지난 10년 간 다른 물가에 비해 2.2배에서 3.2배 빠른 속도로 상승
 - 주거안정보다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에 휘둘린 주택정책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집값, 전세난 등 주거비 상승

4. 물가안정 정책: 정부정책

- 정책선회 이전의 물가대책
 - 농산물, 공공요금, 석유제품, 등록금, 전월세 대책 등 품목별 대응책 마련
 - "5% 성장, 3% 물가"라는 불가능한 목표 아래서 성장 우선 거시정책기조 유지 (따라서 미시정책의 한계 뚜렷)
- 물가우선정책으로 선회
 - 이명박 대통령: "물가에 ... 국정의 총력을" (3. 10. 제 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)
 - 금리 및 환율정책에 변화
 - 공정위를 동원한 물가대책
- 그러나 뒤늦었고, 대책이 부실함

정부정책의 문제점

- 독립성을 상실한 한국은행
- 본연의 사명을 도외시하는 공정위
- 구시대적 관치 행태
 - 휘발유 가격 인하 압력 등
 - 통신요금 인하 압력, MB물가지수 등 물가대책이나 고용대책 등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관치 행태 반복
 - 공공요금 동결처럼 효과는 일시적이고 추후에 더 큰 부작용 초래

4. 물가안정 정책: 대안정책

- 안정, 분배,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거시정책기조 확립
 - 현 국면에서는 안정 최우선
 - 금리 및 환율 단계적으로 현실화, 재정건전화
- 식량 및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
 - 국내 농업생산기반 포기정책 수정
 - 에너지 소비 증가 억제 정책 (산업, 건축, 교통 등): 유류세 인하 반대

- 철저한 독과점 규제 및 경쟁촉진정책으로 독점가격 형성 방지
 - 물가상승 국면에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이 아닌 상시적인 경쟁정책 추진
-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실질소득 지지
 - 최저임금 인상, 비정규직 사용제한 및 보호강화,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원활화

-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완화
 - 서열화 교육 철폐, 반값 등록금 정책 실시
 -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, 재개발정책 전환,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
- 정책변화 담보를 위한 제도개혁
 - 한국은행
 - 공정위
 - 노사정위

